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
----------	----

2022. 9. 28.(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안지윤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9월 16일

-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지윤 의원)

가. 제안사유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 자립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7조)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3조)
- 지원 사업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원가족 양육 및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이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 및 시설 퇴소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충북도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2조는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한 것임.

- 「아동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함) 제16조에서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법 제16조의3에서는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지금까지는 “보호종료아동(퇴소아동)” 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이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며, 해당 용어 자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 연령상 19세부터는 아동이 아닌 성인(청년<sup>3)</sup>)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 라는 수동적 용어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능동적 용어인 “자립” 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용어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2021. 7. 13.)’ 에서 “자립지원 청년” 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법 제39조에서는 퇴소 시부터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자립을 위한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여 15세 이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매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을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용어를 “자립지원대상아동” 으로 사용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 “보호종료아동(퇴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 을, “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대신 “자립지원대상아동” 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는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청년의 용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음.

##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체규정으로,

-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포괄적 내용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 밖에 본 조례안에서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기존 위원회 조례”라 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따라 기존 위원회 조례를 따르게 되는 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는 문제가 없음.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안 제14조는 보칙 규정으로,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기존 정부의 자립지원정책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15세 이상 자립지원대상 아동 까지 확대해 좀 더 일찍 자립지원 정책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자립의 주체가 되어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도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유관기관 간담회 및 조례안 예고,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 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4.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 지원 사업
5.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6. 아동복지시설의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홍보
5.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6.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충청북도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3.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종사자
6. 자립준비청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에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사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사는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삭제
4. 삭제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2.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 소요경비 등

## 3. 관련조문

- 안 제7조(지원사업)
- 안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국비 매칭)
- 아동발달지원계좌(국비 매칭)
- 경계선아동 자립지원(국비 매칭)
- 자립지원전담기관(국비 매칭)
-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도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도비)
- 위원회 수당(도비)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b>세입</b>	4,315,465	4,671,617	5,134,027	5,640,475	6,197,567	25,959,151	
국비	3,763,605	3,994,346	4,393,782	4,833,160	5,316,474	22,301,367	
도비	551,860	677,271	740,245	807,315	881,093	3,657,784	
<b>세출</b>	5,187,528	5,699,523	6,264,723	6,884,240	7,565,708	31,601,722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국비70%,도비12%, 시군비18%)	1,323,800	1,456,180	1,601,798	1,761,976	1,938,175	8,081,929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비70%,도비9%, 시군비21%)	3,263,049	3,589,352	3,948,289	4,343,119	4,777,428	19,921,237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국비70%,도비12%, 시군비18%)	60,750	66,824	73,507	80,858	88,944	370,883	
자립지원전담기관 (국비80%,도비20%)	472,383	519,621	571,583	628,741	691,615	2,883,943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도비100%)	40,000	40,000	42,000	42,000	42,000	206,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교육 (도비100%)	26,546	26,546	26,546	26,546	26,546	132,730	
위원회수당(도비1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b>재원 조달</b>							
의존 재원	소계	3,763,605	3,994,346	4,393,782	4,833,160	5,316,474	22,301,367
	보조금	3,763,605	3,994,346	4,393,782	4,833,160	5,316,474	22,301,36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551,860	677,271	740,245	807,315	881,093	3,657,784
	지방세	551,860	677,271	740,245	807,315	881,093	3,657,784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872,063	1,027,906	1,130,696	1,243,765	1,368,141	5,642,571	